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5. 11. 4.(화) ~ 11. 17.(월) 〈14일간〉

3. 대상기관 : 35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28개)
○ 여성가족실 ○ 복지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 여성가족실 소관(11)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28개)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 복지실 소관(10)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광역자활센터 ○ 시민건강국 소관(7)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국 민 의 힘	김 영 옥	수석전문위원 : 임영미 의사지원팀장 : 주승원 전 문 위 원 : 김소은 행 정 6 급 : 박현우 사무운영7급 : 심선영 행 정 7 급 : 김수은 행 정 8 급 : 조용민 입법조사관 : 우현재 입법조사관 : 도미화 입법조사관 : 신현태 입법조사관 : 김진영 입법조사관 : 김종훈 입법조사관 : 이지현 정책지원관 : 박서영 정책지원관 : 양옥수 정책지원관 : 백순정 정책지원관 : 양희수 정책지원관 : 권민진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부위원장	국 민 의 힘	신 동 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 금 란	
위 원	국 민 의 힘	강 석 주	
〃	국 민 의 힘	도 문 열	
〃	국 민 의 힘	신 복 자	
〃	국 민 의 힘	이 성 배	
〃	더불어민주당	김 인 제	
〃	더불어민주당	이 병 도	

5. 감사 시행 경과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4.(화)	행정사무감사 준비		
11.5.(수) 10:00	〈여성가족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위원회 회의실	
11.6.(목) 10:00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위원회 회의실	
11.7.(금) ~11.9.(일)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0.(월) 10:00	〈복지실〉 〈서울시 복지재단〉	위원회 회의실	
11.11.(화) 10:00	〈복지 관련 기관〉 -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위원회 회의실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광역자활센터		
11.12.(수)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3.(목) 11:00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4.(금) 10:00	〈특수 법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직영 병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위탁 병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건강 관련 기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위원회 회의실	
11.15.(토) ~11.17.(월)	감사결과 자료정리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요구
계	331	143	109	79
여성가족실	61	33	20	8
여성가족재단	14	4	7	3
여성가족 관련 기관	50	16	22	12
복지실	58	30	13	15
복지재단	17	7	3	7
복지 관련 기관	45	24	4	17
시민건강국	44	13	22	9
보건환경연구원	3	-	2	1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24	12	9	3
건강 관련 기관	15	4	7	4

여성가족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25	53	49	23
여성가족실	61	33	20	8
여성가족재단	14	4	7	3
여성가족 관련 시설	50	16	22	12

2 세 부 내 역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여성가족실 -33건

1.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재구조화 검토를 요청했으나, 크게 진척이 없음.
   - 신규시설 설치 시 보조금 미지원 등을 통해 시설 수를 20개소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기존 시설보다 한부모가족의 수요에 더 적합한 신규시설이 생기더라도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미지원하는 것이 이용자 관점에서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3년 연속 입소율 50% 이하 시설은 정원·종사자 조정 및 예산 감액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전국 단위 지침으로 서울시 현실(입소율 60% 수준)과는 괴리가 있음. 서울시 여건에 맞도록 입소율 기준 조정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기 바람.
   - 동일 지역 내 생활시설·양육시설이 중복되는 경우, 시설을 통폐합하여 그 확보된 예산으로 전세임대·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2.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지침상 종사자는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66센터는 센터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수탁기간과 종사자 근무기간이 맞지 않아 결원이 반복되는 등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음. 여성가족실 소관 전체 위탁기관의 계약 관행과 종사자 노동환경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할 것.
3. 직장맘지원센터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키즈카페 면적기준, 설치기간 등의 재검토가 필요함.
5. 키즈카페 공사비, 설계비 등 지역별 편차가 많음. 공사비 산정 근거, 공사비 재점검 등이 필요함.
6.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7.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 예산 및 집행 부진함.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거나 또는 적정 집행이 필요함.

8. 보호출산 긴급보호비 집행률 저조함에 따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9.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집행률 저조함, 보증금 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확대할 것
10.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집행률 저조, 사업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을 고려해 봐야 할 것.
11.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첫만남 이용권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경우 포인트 차감 순서가 달라 교통비로 사용하더라도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이 먼저 차감됨. 각 사업의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 못 하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12. 엄마 아빠택시, 가사서비스 등은 사용기한과 신청 마감일이 서로 달라 12월에 태어난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종료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 잔액 이월 등 개선 필요함.
13. 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 탑승 시 하나의 카시트로 불편, 동시 바우처 결제 불가, 개선 필요함.
14. 탄생응원몰 타 시도민도 동일하게 이용, 서울시민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음. 다량 구매 후 중고거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함.
15.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서울시 독자 운영 유지 필요함.
16. 아동복지센터 조직 진단 개선방안 용역 완료 이후 인력과다에 대한 구체적 개편 필요함.
17.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아동복지센터에서 입퇴소하는 대상 이름 정보에서 가운데 글자만 마스킹 되어있음.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있으므로 시정 필요함.
18.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금 소송에서 기관위임사무와 소멸시효를 들어 3심까지 항소한 것은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행위이며, 또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반하는 것임. 또한 이 사건은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사회가 어떻게 바로잡고 현재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단순한 배상금 지급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응 원

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약자와의 동행이 약자와의 투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19. 과거 서울시로부터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와 권리 구제에 앞장서는 행정을 구현할 것.
20. 어린이집 안심공제(배상보험) 내 보육교직원 형사방어비용 지원 내역 중 실제 아동 학대로 판결나거나 그에 준하는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된 비용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후에 환수(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신설하여 조치할 것.
21.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교권은 보호하되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혈세가 지원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 심사 및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것.
22. 주요재정사업평가가 미흡으로 떴을 때 노력 및 개선사항 없이 종결하는 것은 문제임.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도 사업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보다 단순 예산 삭감만 함에 따라 스카우트 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감소된 인원이 25개 자치구 활동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재원 분담도 자치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임. 안심이앱 다운로드 대비 가입 및 주요서비스 이용자 수 적은 문제 해결 바람. 또한 안심택배함 이용률 점차 떨어짐. 사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기 전에 개선의 고민이 필요함.
23. 산후우울증 증가 대비 심리지원 실적 매우 미흡함.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규정(산후조리경비 등)으로 이용 곤란 다수 발생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과 통합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출산 지원 관련 각 사업의 신청기간 정리 필요함.
24. 2024~2025년 융합형 키움센터 증가 없음. 미설치 된 자치구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하지 않음. 학생 수가 많은 구(예: 강서, 영등포, 서초 등)에도 부재 사례 존재하며, 지역 간 편차가 과다함. 공간 확보·조정을 통해 미설치된 구 우선 배치 및 확대 추진을 요구함.
25.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료상 실적표 표본 축소·숫자 불일치·만족도 과대, 연도 배열

통일되지 않음 등의 문제가 있음.

26.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자료 수치가 불일치·오류로 보임. 예산 집행의 투명성(대상자 수 대비 집행액, 집행 경로) 검증을 요구함.

27.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현행 24~36개월만 지원으로 민원이 다수 있음에 따라 연령 확대·소급 적용 검토를 촉구함.
28. 휴대용 안심벨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긴급입찰한 것은 부적정하며 통상 40일 전 입찰공고 하는데 10일로 긴급입찰하면 참여업체가 제한됨. 또한, 연말까지 배부하고 효과성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29. 유령등원은 입소 후 미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따라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못 보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보조금 부정수급(아동 허위등록)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보육사업 재설계가 필요함. 불법 색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보육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30. 모아어린이집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음.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개선방안 마련 바람.
3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인 주거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좋았으나 연말 집행률이 10%수준으로 저조하며, 실제 11월말 지원받은 가구수가 없는 것은 신청에서 선정 및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이 너무 긴 것으로 보여짐. 이는 여성가족재단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중복 여부는 SH에 요청하는 등 사업의 단계가 복잡하게 구조화 된 것이 원인으로 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기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부서인 주택실과 연계한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출생신고 때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32. 키움센터 운영시간·인력기준·근무체계 등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운영지침을 마련해놓고 의회와 현장에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함.
33.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자문위원회 구성에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대부분 부재, ‘기타’ 항목 인원이 다수임. 사례판단·이의신청 처리 과정의 전문성 결여로 행정소송 제기 및 패소 사례 다수 있음. 관행적으로 자문위원을 임의 변경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상설 참여가 필요함. 이런 요인으로 아동학대 판단 자문위원회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 차원의 운영기준·지침 제정 및 점검 강화가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 - 4건

1. 재단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 대관 내역 확인 결과, 정치적·종교적 성격의 행사에 대관한 사실이 확인됨. 재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할 것.
2. 재단의 핵심가치가 시정목표 및 재단 고유기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직원들도 핵심가치와 업무 방향성을 명확히 체감하지 못해 내부 만족도가 외부 만족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향후 핵심가치 수립 시 여성가족실과 소통하여 재단 고유기능과 부합하도록 하고,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연구사업에서 정리원 수당 내역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것.
4. 위탁사무 수행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이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채용조건이나 내부교육 등이 필요하며, 위탁사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성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16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1. 현재 센터의 누적 검사 인원(약 1만 5천 명) 대비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된 실적은 약 1%(89명)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함. 이는 센터가 이용자에게 단순한 치료기관 명단(정보)만 제공할 뿐, 바우처 지원이나 비용 할인 등 연계를 유도할 실질적인 어드밴티지가 없기 때문임. 단순 정보 제공을 '연계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용자가 센터를 통해 전문 기관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유인책을 마련하여 연계율을 높일 것.
2. 전문 치료기관으로의 연계 후 해당 아동이 실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치료를 통해 어떤 발달적 성과(개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함.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경과를 공유받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3. 검사결과에 따른 '관찰요망', '도움 필요' 아동들이 실제 센터의 프로그램(발달놀이터,

심화평가)이나 외부 치료 기관으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단계별 누적 통계가 명확하지 않음. 단순 검사 건수보다는 검사 후 실제 관리 단계로 진입한 아동의 수치와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여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비할 것.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4. 업무보고에서는 장애 관련 개발·연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발달장애·경계성지능 아동의 키움센터 이용현황을 요청하자 파악이 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특히 거점형 키움센터는 교육청 늘봄학교와 연계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키움센터의 지원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5.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독립형 주거 공간 마련, 청년통장 등 관련 제도 적극 안내가 필요함.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6. 회의 다과비가 1인 4천원 초과 지출됨. 기준 준수 필요함.
7. 심리치료인력과 상담원의 전문성 요구됨. 별도의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이 없다면 시차원의 교육을 마련해야 함.
8. 시설의 채용은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에서 채용 후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9. 센터 실적 자료의 산정방식(명수, 지원횟수, 홍보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 성과 파악이 어려움. 각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성과 산정 방식과 표기 체계를 명확히 할 것.

10. 예산이 가사서비스와 축제에 편중 된 반면, 다른 사업은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집행률도 50% 이하로 저조함. 센터의 본래 목표인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과 역량개발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음.

11. 전국단위로 모집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주거자금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하는 것은 부적절함.
12. 9월말 기준 집행률이 49%로 매우 저조하며, 25년도에만 이직률이 인원대비 40%로 매우 높아 조직의 안정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 또한, 1억원 이상의 규모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구조 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질 지원 중심의 사업 운영 필요함.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13.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타 시설 전원 결정 시, 현재는 담당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단순 상담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ADHD, 조현병 등 고위험군 아동이 다수임에도 원가정 복귀 비율이 높은바,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치료 경과를 수치화하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크' 및 '판단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담당 공무원) 및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근거 자료로 제공할 것.
14. 입소 아동 중 ADHD, 조현병, 발달장애 등 전문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이나, 현재 쉼터 내 프로그램은 보드게임, 놀이치료 등 보육적 측면의 단순 심리지원에 그치고 있음. 쉼터 협약서를 보면 쉼터의 목적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는 바, 단순 상담을 넘어 전문 의료기관 및 심리치료센터와 연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외부 자원 연계 방안을 강구 할 것.
15. 치료사가 인사업무 등 행정업무까지 수행 중이므로, 행정업무는 보육사가 담당하도록 업무분장 조정 필요
16. 쉼터 조직도에 수탁법인((사)꿈이루는 사람들) 이사회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 필요함.

2 건의사항

◆ 여성가족실 - 20건

1. '엄마아빠VIP존' 주말 이용 제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개선이 미흡함. 주말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2. 여성가족재단이 정치적·종교적 성격의 행사에 회의실 및 세미나실을 대관한 사실이 확인됨.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전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대관 규정을 점검하고, 공통지침 마련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수립할 것.
3. 신규 개소 예정인 '서울성착취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성산업감시본부,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음. 또한, 기존 십대여성건강센터·일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착취·성매매 유입 전 취약청소년 발굴 및 지속 지원 기능이 신규센터 계획(조직·인력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임. 다른 시설과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하고, 예방적·지속적 지원 기능 보강할 것.
4. 기존 십대여성건강센터는 법인·종사자 간 갈등 장기화 되다 결국 운영 중단됨. 이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 있는 수탁기관 있는 경우 조기 개입하고 중재하여 시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것.
5.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확장되면서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 격차 커지고,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뿐 아니라 종사자-서비스제공기관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음. 사업 확장에만 그치지 말고 서비스 품질관리, 종사자 처우, 갈등 조정 시스템 함께 강화하는 방안 필요함.
6. 다문화 지원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실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되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의 종사자 처우(인건비) 및 이용자 지원(정착지원금)에 차별이 발생함. 소관 부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파악하고, 부서 간 협력·논의를 통해 정책적 연속성과 통합성 확보할 것.
7. 저출생 대응은 단기적·개별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동행·모아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 어려움. 제5차 보육 중장기계획 수립 시 구조적 문제와 질적 개선 방안 포함할 것.
8. 정신적·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증가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아동양육시

설, 특히 소규모시설의 운영상 어려움 심각함. 실태 파악 및 지원 필요함.

9.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서울시 정착금 2천만원은 긍정적이나 주거지원 부분은 충분하지 않음. 특히 보호종료아동 주택공급(청년매입임대 우선공급)의 경우 50호에 지나지 않는데, SH공사 공가가 연 2천호(25년 9월 기준)인데, 여가실과 SH가 협의하여 공가를 활용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람.
10.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가 종료된 후 자살충동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전담 심리상담인력은 4명뿐임. 특히 아동힐링센터 운영 예산 대비 상담 예산 및 인력은 매우 부족한 편인데(상담지원 예산 약 4천만원, 상담인건비 약 3억원인 반면 아동힐링센터는 연 29억원에 운영됨) 기능 대비 재원 배분이 불균형 하니 상담예산 및 인력을 늘려주기 바라며, 사업명도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람.
11. 5인 이상 다자녀가구 주거 실태 파악 및 주거지원이 필요함.
12.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실질적 사후관리가 필요함.
13. 몽땅정보 만능키 관련하여 산후조리경비와 같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번에 신청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번에 신청 매뉴얼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14. 몽땅정보 만능키 관련 명칭 변경이 잦아 혼란이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건의함.
15. 성심모자원 관련 남은 입소자들에 대해 시설 이동과 새로운 시설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함.
16. 서울형 가사서비스 업체 증가와 함께 3시간 기준을 다 채우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음. 이용자가 후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7. 과거 국가를 비롯한 서울시로부터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배상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국가 위임 사무라며 책임을 부인하다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후 절반의 책임을 인정하는 식의 모순된 행정 태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된 행정 태도를 지양하도록 하고 선진적이고 성숙한 행정 태도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

18.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중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19. 동행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데, 대기수요 가중이 우려되며, 대기 수요가 적은 어린이집 중심으로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함.
20. 키즈카페·키움센터 야간운영과 관련해서 야간근로 1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민간 키즈카페(교회 등)에서도 야간 운영을 지침으로 강요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음. 안정적인 야간운영을 위해서는 키즈카페·키움센터 야간운영 인력 처우개선의 검토가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 - 7건

1.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단의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3.1% 증가했고, 그중 대표이사 업무추진비가 전체 업무추진비의 76%를 차지해 다른 출연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임. 업무추진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 있음.
2. 재단 자체사업보다 수탁사업 비중이 커지고 있고, 전체 사업비 대비 연구비가 너무 적음. 재단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 검토가 필요함.
3. 디지털성범죄 관련 AI 삭제 지원 시스템 누락 확인 필요. 인공지능 분석의 사각지대도 확인 필요.
4.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관련 성평등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 전환 정책에 포함될 경우 기존의 노력과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대응 방안 마련 필요.
5. 스토킹피해자 지원 관련, 상호 소송절차에 있는 사건 등을 사유로 피해자가 급하게 내민 손길을 피해지원센터가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재단이 직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정 범위를 고민해 보기 바람
6. 여성단체 지원 프로그램(양성평등 활동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단체 역량 강화에 더 심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될 필요가 있음.
   (재단 운영 시설의 입주 단체 및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필요)
7. 피해자 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등으로 유사경력 확

인이 필요함.

(전문 인력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22건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1.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과 현장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함. 사업 운영 효율성 점검이 필요함.
2. 종사자 이직률 높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례도 있었던 만큼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분석 필요함.
3. 2029년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예정임. 센터 기능 변화 및 역할 재정립 필요함.
4.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공방 위주 사업으로 되어 있음. 탈성매매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등 현실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직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5.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 위주의 발달검사가 진행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 시행 필요함.
6. 아이발달 검사 및 지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검증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7. 전문 치료 협약 기관 선정 시 지역별 형평성, 접근성 고려 및 심사평가 기준과 결과가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심사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8. 아이 발달 관련 사업을 여성가족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이 발달 문제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됨. 여성가족실은 부모, 교사 등 양육자의 교육 및 상담에 집중하고, 아이 발달은 의료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함. 두 영역의 역할 및 기능 분리, 센터의 중점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9. 23년도 종사자 이직률이 높음. 이후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직률 감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10. 건물 임차료가 많음. 축소나 이전 검토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1. 느린학습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내부 전문인력 보충 필요하며, 홍보를 통한 일시돌봄 이용자 수 증가가 필요함. 또한, 지역 내 아동 돌봄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이용 아동 확대, 예산의 효율성 증대,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해 향후 노력이 필요함.
12. 거점형 센터는 키움센터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강화해야 함.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13. 다양한 연령층(미취학~자립준비청년)의 아동을 위한 맞춤 지원과 정신적·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케어를 위해 인력 등 보강 검토 필요함.
14. 소그룹(규모)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지역사회·학교로부터의 편견에 대한 우려 있으므로 개선 방안 고민 바람
15. 예방접종 실적, 재산조성비 집행률, 아동인권교육 및 외부기고나 협력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집중 요보호아동 수(28명) 대비 임상심리상담원 수 1명은 매우 부족해 보임. 아이들의 집중 치료 시점을 놓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연계 치료 및 인력 충원 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
17. 반복적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대한 변경된 법인의 기관장으로서 대책 필요함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18. 종사자 수 대비 사례관리 건수가 너무 많음. 감당 가능한 수준의 업무량인지 검토 필요함.
19.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핵심 역할에 집중하고, 일부 기능은 타 기관(복지관, 심리치료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20. 직업교육훈련 후 취업 시 고용유지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함
21. 5회차 수탁 중인데, 여성들을 위한 특화사업이 있어야만 존재 이유가 있음. 남부 센터만의 특화사업 프로그램 마련 필요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22. 수탁 기관 운영 평가에서 필수 이행 사항인 종사자 의무 교육(인권, 성희롱 예방, 청렴 교육 등) 미이수와 공고 기간 준수 위반(날짜 계산 착오) 등으로 감점을 받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운영의 기본 원칙 위반이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복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협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3 기타 자료요구 등

◆ 여성가족실 - 8건

1. 직장맘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용
2. 보호출산 대상자 현황
3. 면적 작은 키즈카페 이용 현황
4. 아동복지센터 소장 출장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5. 행정사무감사 76번 자료 보완 제출
6. 휴대용안심벨 입찰관련서류
   - 입찰공고문, 지침, 관련서류 , 제안서평가표, 제안서
7. 모아어린이집 418개소 정원 대비 입소인원 현황
8. 키움센터 관련 운영 가이드 라인 등

◆ 여성가족재단 - 3건

1.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 주거비지원사업팀 신규 직원 이력 사항
3. 여성가족재단의 신규 정책 개발 현황 자료 제출 및 보고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2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1. 연령별 발달검사 도구
2. 아이발달지원센터 관련(지역사회 치료 전문기관 연계 현황)
3. 최근 3년간 조기개입 참여율
4. 최근 3년간 치료 전문 협약기관 참여율

5. 지역사회 연계 협약기관 심사기준표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6. 직원 근속연수 최종 자료
   - 최초근속일과 구분하여 2016년 초록꿈터 시설 분리 운영 기준으로 근속 산정 자료
7. 2023~2025년 후원품 사용 내역
   - 타기관 인계 관련 상세 내역
8. 2023~2025 인건비 현황 및 증감 사유
   - 인건비 내역 및 증감 사유
   - 이직현황 상세 내역
9. 집중보호아동 상담 및 치료 관련 외부자원 연계 현황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10.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력 및 자격 현황
11.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사례회의 개최 현황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2. 세부 사업별 구체적 추진 실적

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 요구
계	120	61	20	39
복지실	58	30	13	15
복지재단	17	7	3	7
복지 관련 시설	45	24	4	17

2 세 부 내 역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복지실 - 30건

1.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50플러스재단이 대행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 조례상 대상 연령(40~64세)과 시니어일자리 사업의 법정 대상 연령(65세 이상)이 불일치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또한 기존 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설치했음에도, 접근성과 프로그램 연계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50플러스재단에도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됨. 운영방식, 운영주체, 소관부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어르신 일자리 지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2. 장애인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은 3년 주기로 지도점검하는데, 거주시설은 지도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할 필요 있으며, 입소자 특성(발달장애인인, 성인, 미성년 등)에 따라 평가 내용 및 방법 달리할 필요 있음.
3.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1·2차 성과발표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으며, 세계경제학자대회 발표 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 확인되어 신뢰성과 효과성에 의구심이 듦. 시범사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조치 논의 필요함.
4.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저소득 서울시민 부가급여' 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함. 면밀한 설계와 개선방안 검토할 것.
5.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간 환경 격차 관련 시설에 따라 복지 품질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있음. 서대문구 장애인시설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고 주소가 다르게 나와 있는 곳도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설과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6.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보조기기는 많이 없음. 발달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보조기기가 뭔지 고민해야 함. 사업 내용에 보면 맞춤 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맞게 장애인들의 니즈를 맞춰야 함.
7.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시 보조금 제한 등 필요함. 비법정시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8.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성희롱,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민원이 있음 복지관 전체

다시 점검이 필요함.

9.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외벽이 붕괴 이후 하자처리에서 문제 많음. 서울시 전체 종합복지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시공 자재 적절성 등 확인 필요함.
10. 평화로운 집의 해임사건이 유독 많음.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함.
11. 상이군경복지관 직원에 3억 4900만원 횡령, 반납해야 할 것, 지휘 감독 등 안전장치가 필요함.
12. 남대문 쪽방상담소의 경우 내부고발자는 취업을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 내부고발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
13.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 필요함.
14.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29억 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2024년 지원 실적이 41건(약 3,800만 원)에 그침. 경기도와 같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완화된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5.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1,898건)의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0건이며, 관악구(1,762건) 또한 5건에 불과하여 피해 규모대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해당 자치구들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발굴 및 신청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 체계를 가동할 것.
16.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2030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음. 주거비 지원 외에 당장의 생계 위협을 겪는 청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정책 부서와 연계하여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17.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이 주택실(전월세종합지원센터)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복지실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주택실의 피해자 데이터와 복지실의 지원 자원을 연계하여, 피해 결정 통지 시 긴급복지 지원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

18.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관련 강북의 남성 쉼터가 5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애초에 장애인쉼터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을 지정하여 리모델링 하였음.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리모델링 완료된 쉼터는 내부 구조상 2명만 입소 가능. 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람. 또한, 리모델링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관리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19.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종사자들 간 직장 내 괴롭힘신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등 고발 문제가 심각함. 법인이 운영 못하겠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임.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서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겠지만, 그 피해가 쉼터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갈 수 있음. 종사자 내부 갈등 문제 속히 해결하여야 함. 또한 주중 야간 및 주말에 근무자가 1명인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려운 1인 근무 체계는 매우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
20.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한 종사자의 호봉이 8호봉에서 16호봉으로 갑자기 오름. 채용공고가 12호봉 밑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16호봉이 되는건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및 장애아동쉼터 관리에 문제 많으므로 개선 바람.
21.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원장의 잦은 교체가 문제 있으므로 개선 필요
22. 재정사업평가결과 미흡으로 뜨는 사업이 다음연도에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어르신 종사자 지원'의 경우 미흡에서 보통이 되긴 했지만 예산만큼은 처우 개선에 쓰이는지 의문이고, 쉼터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그 장소를 이용했던 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박탈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임.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클 것임. 처우개선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함. '커리어 플러스 센터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에서 미흡으로 내려옴. 성과가 저조한 이유와 세부 실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23.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운영'도 보통에서 미흡으로 내려옴. 이 부분이 생활지도원을 운영했는데 가서 본 결과 효과가 전혀 없음. 종사자 인원을 더 보강해준다든지 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지도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님. 아동들에게 피해가 크게 가고 있음. 종사자들 인원 보강이 필요함.

24. ‘사회보장 위원회 운영’도 미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내부 자체 평가나 외부 자문 결과 요청함. 향후에 지표를 개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결과들이 있는지 자료 제출 요청함.
25. 연말에 ‘긴급 복지 사각지대 개선’ 국가형 긴급 복지 조기 마감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공백 때 선지원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할 것.
26. 은혜장애인요양원에 서울시 예산이 지급되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27. 서울역 인근 및 지하도의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시설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 또는 센터 이전 등 적법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서울역에 노숙인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노숙인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숙인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서울시는 노숙인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 설정 없이 노숙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이 부분에 서울시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28. 자활자원과 및 자활센터의 총 예산은 3000억 원 수준으로 노숙인 지원대상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2천만원임. 이는 연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연 918만원보다 많은 금액임. 노숙인 대상에 쪽방촌 주민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쪽방촌의 월세는 넓이로 환산할 경우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주거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다시 노숙생활로 연결되고 있음. 외국의 노숙인 지원제도는 주거를 우선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효과적인 노숙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29.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퇴소자 수가 거의 비슷한데 노숙인들이 줄지는 않는 반면 입소자만큼 퇴소자가 있는데 사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지 의문임. AI 또는 디지털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노숙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0. 복지실 소관 시설 직원 징계 사항’을 보면 시립장애인복지관 차량사고(3건)가 눈에 띄며, 세 사람이 같은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건이 있음. 내부 조사보고자료가 있을 것으로 이런 부분은 기관 경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함.

◆ 서울시 복지재단 - 7건

1. 25개 신청 기관 중 1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적용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심사 배점표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특히 '유경험 수행 기관 우선 선정'이라는 원칙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수치화되고 적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향후 공모 사업 진행 시 심사 기준과 배점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고독사 발견 경로, 주거 형태, 연령대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3. 서울시가 고립 가구 발굴 시스템 도입과 채널 다각화를 계획했으나 진척이 더딘 상황임. 현장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밀착형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발굴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립 가구 발굴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차원의 연구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
4. 외로움안녕120 운영을 통해 외로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계층의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고독사의 인과관계(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여 질적 성과가 도출되길 바람.
5. 24시간 관제서비스 관련 실제 관제 출동 건수는 낮은 것으로 보임. 비용대비 효과성 있는 방안에 대비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6. 행감제출자료에 예비비를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인력증원봉급예비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회계지침에 따라 세부항목 구분해서 관리 할 것.
7. 매년 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치인 내부유보금을 적절히 계상하여 출연금을 요구해야 함. 불용액의 반복누적 방지를 위해서 일정비율 이상의 내부유보금 보유 시, 다음연도 출연금 산정(편성) 시 감액하는 등 유보금 관리를 하기 바람

◆ 복지 관련 시설 -24건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 대부분 사업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함. 집행률 관리 철저히 하고, 사업 제때 추진하도록 할 것
2. 발달장애인 쉬운 조사 설문 문항 등 의원별 제출 내용이 불일치하고 의회 자료 제출 내용이 일관되지 않음.
3. 복지관 주요 프로그램 대기 기간이 3년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긴 것은 문제라고 봄. 언어 치료는 특히 시기성이 중요한데 현재 대기자가 너무 많고 언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함.
4.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인력 미채용 원인파악과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5. 노숙인 규모는 감소 추세인데, 연인원 기준 실적 제출은 실제 규모와 괴리가 있어 의미가 없음.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마련하고,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그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할 것.
6. 2005년도 이후에 서울역 인근 및 지하도의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시설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 또는 센터 이전 등 적법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7. 노숙인 일자리지원사업, 지원주택사업 등 각 사업에 대한 예산과 실적이 불분명하며, 입소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주거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8. 법인전입금은 이월하기보다는 당해연도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반복되는 이월은 부적정함.
9. 사례관리 내용이 부실하며, 직원교육과 비전을 강화하여 클라리언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10. 2023년과 2024년에 예산 초과 지출 및 목적 외 집행 등 기초적 회계 규칙 위반이 2년 연속 발생함. 예산 편성·집행을 철저히 하고, 회계 관리 강화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1. 센터 실적 자료의 산정 기준과 단위(명수, 지원 횟수, 홍보 횟수 등)가 불명확하고 연인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질적 성과 파악이 어려움. 각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성과 산정 방식과 표기 체계를 명확히 할 것.
12. 등록회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수가 누적인원으로 관리되고 있음. 회원탈퇴, 이사, 장기간 미이용 등으로 정리가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실인원으로 현행화가 필요함.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13. 쪽방주민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음에도 쪽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은 중복 소지 있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14.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내 임대서비스 제공 시 배송에 대한 정보가 없음. 홈페이지에 배송에 대한 정보 기재 해야 함
    - 보조기기센터 이용자들이 배송이 가능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15. 시설장이 자주 바뀌는 부분 문제 및 종사자 간 고소, 고발 문제가 심각함. 종사자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부모임. 결국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는 부분은 아이들임. 종사자 간 아동학대 신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결과가 무혐의라고 끝날 사항이 아님.시설 종사자 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감. 신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서 살고 있음. 법인이 법적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진행해서 결론 낼 것인지 고민 바람.
16. 법인 사무국 내 아동복지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쉼터 운영이 부실함. 입소아동의 인권은 누가 지키나? 9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시설 운영을 잘해야하고, 원 가정 복귀를 위해 주력하길 바람

17. 센터운영위원과 법인 운영위원이 중복된게 있음. 2023~2025 임원수당 지급을 보면 알 수 있음. 시정 조치 바람.
18. 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에 경사로가 없이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시설에도 장애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편의시설이 없는 등 시설의 관리가 불충분함.
19. 생활지도원 8명(남아 4명, 여아 4명)인데, 모집자격이 사회복지사로만 되어있음. 장애 관련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피해아동을 케어하는 경력자 채용할 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인식,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성이 높은 종사자들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함.
20.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보면 법인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채플(종교활동)을 강요하거나, 직원들을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21. 직원들 명절선물 등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등 문제가 있음. 후원금은 직접 사업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22. 사회서비스사업 중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은 참여율 저조, 상담 인원 대비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는지 검토 필요함.

<서울광역자활센터>

23. 중앙자활기금 사업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세입·세출이 불일치하며, 자활센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외부 재원을 받아 집행했으나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됨. 세입·세출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 관리 철저히 할 것.
24. 지역센터 자활사업 유형별 중간 탈락자에 대한 사유와 지역자활사업의 문제점 등 광역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2 건의사항

◆ 복지실 -13건

1. 통합돌봄의 기본은 돌봄SOS센터, 장수센터 등 기존 기관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활용하는 것임. 그러나 돌봄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현 체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규모와 역할이 통합돌봄협의체보다 훨씬 작고 제한적이어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검토 바람.
2. 장애인의 욕구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다음 사항을 제안함.
   -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공급 및 개조 지원
   - 장애인 차량에 장착되는 보조기기의 등록 및 지원
   - 휠체어 전용 백팩과 보완대체의사소통(ACC)도구를 보조기기 품목에 포함
3. 다양한 1인가구 중 특히 중장년 남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실제 이용자는 여성 비율이 70~80%로 매우 높고, 1인가구 지원정책 소관 부서가 여러 차례 변경됨(여성가족실 → 1인가구추진지원단 → 복지실 1인가구지원과).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 및 그에 따른 추진체계의 적정성 검토 바람.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연령 확대(34세→36세)와 서울시 일괄 선발방식 도입으로 경쟁률이 급증하면서, 탈락자 증가에 따른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우려됨.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발인원 증원과 예산 증액 검토 바람.
5.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기초지자체에 기반해서 시행되다 보니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함. 사업 확대와 본격 시행에 대비해, 현행 통합돌봄추진단 외에 '지원단' 형태의 광역단위 조직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좋은 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가 중요하므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가 후퇴하지 않도록 할 것.
7. 어르신 돌봄을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처우 및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검토 바람.
8. 어르신 인구의 40%가 60대이며,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체력을 갖춘 경우가 많음. 또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60대 초기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함.

9.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교육 외에도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함.
10. 의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 의결했음에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소극행정임. 향후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11. '3년간 노숙인 생활 시설 입소자 현황' 제출자료에서 영등포의 광야홈리스 센터를 보면 민원이 계속 발생함. 이 중 주요 민원은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의 수탁법인의 운영능력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 등 이력 사항을 검토해야 함.
12. 복지실에서 지도점검 많이 했고 민원처리 많이 했을 텐데 시설의 자체 대처 미흡에 대해선 법인을 과감히 바꿔야 함. 민원이 많이 나오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적정한 수탁기관으로 변경까지도 고려해야 함.
13. 서대문구 늘푸른 자활의 집과 성동 비전트레이닝 센터도 민원이 많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점검 필요함.

◆ 서울시 복지재단 - 3건

1. 어르신 인구의 40%가 60대이며,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체력을 갖춘 경우가 많음. 또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어르신 일자리 연구가 필요함.
2. 은둔·거부 가구는 기존 복지 시스템에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보유한 '위기 징후 DB(공적 데이터)'를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및 대상자 발굴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공적 데이터와 민간 기관의 현장 발굴 노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위기 징후 데이터를 수행 기관과 실효성 있게 공유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하여 고독사예방을 위한 똑똑안부확인, AI 안부든든, 1인가구안

부보살핌 등 유사·중복서비스로 인한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복지 관련 시설 – 4건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1. 노숙인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는 추세임. 정신질환 노숙인의 입원 연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 공공병원의 수용이 원활하지 않아 50% 이상이 타 지역 병원으로 인계되고 있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민건강국 등과 협력하는 전문적 합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2. 수탁법인인 굿위드어스의 목적사업을 명확히 하고 레인보우마켓 등 후원금은 복지사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3. 쪽방주민은 감소하는데 예산이 계속 늘고 있음. 서울시가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서 그런 것은 아닌지 개선해야 함.
4. 쪽방주민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자립 의지를 저해할 수 있음. 정책 검토 바람.

3 기타 자료요구

◆ 복지실 - 15건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관련
   - 등록과정,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종류, 4개 센터별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이용률
   - 장애인보조기기 연간 신규등록 및 신청 건수
2.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관련
   - 센터 운영실적(이용내역), 취업사례, 민원사항, 만족도조사 내용
3. 1인가구지원센터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목록 및 내용
4.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관련
   - 재지정 심사 기관별 평가 결과
   - 재지정 심사 통해 청산된 활동지원기관 체불임금 내역
   - 휴일 근무 활동지원사 처우·임금 후퇴 관련 민원 접수 내역
5. 통합돌봄추진단 회의록, 논의내용 등
6.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구별 현황
7. 3년간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현황과 조치결과
8. 장애인 거주시설별 보조금 차이 발생 사유
9.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평가 '매우미흡' 관련
   - 내부 자체평가, 외부 자문자료, 유사위원회 운영방식 벤치마킹 반영 결과 등
10. '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선지원 제도 지원요건, 실적
11. 최근 3년치 동일법인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정량평가 관련 자료
12. 최근 3년간 용역, 공사, 물품 계약 현황
    - 발주금액, 낙찰금액, 공고기간, 긴급공고 현황, 관련 근거, 수의계약 사유, 공고 참여업체, 낙찰업체, 비교 견적업체
13. 최근 3년간 변경계약 체결 현황(2천만원 이상)
    - 변경 전후 과업지시서 포함
14. 노숙인 생활시설 입퇴소 시 입소자 정보 공유 여부 및 현황

15. 비전트레이닝센터, 늘푸른자활의집

- 최근 3년 민원 제기 상세내역, 재계약·재위탁 관련 정보, 시설장 변경사항

◆ 서울시 복지재단 - 7건

1. 복지 분야 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 현황
2. 희망두배 청년통장 민간재원 확보 현황
3. 북지관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시 복지관 개선사항 반영 결과
4. 서울형 임차보증금 증액 개선시행 세부내용
5. 좋은 돌봄 인증 심사위원 개선 사항
6. 은둔거부가구 맞춤형지원사업 수행기관 세부 선정 과정
   - 25개 기관 중 10개기관 선정 기준, 과정 등
7. 은둔거부가구 맞춤형지원사업 모니터링 추진 현황
   - 전담 사례지원단, 전문가 자문단을 포함한 참여기관 모니터링 추진내용 등

◆ 복지 관련 시설 -17건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 이월금 항목별 제출(증감여부)
2. 24~25년 지정후원금 종류, 금액
3. 재가장애인 사례관리(1건) 내역
4. 24~25년 직원 급여 비교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5. 2024년 노숙인 실태조사 자료, 종합지원센터 평가체계
6. 종합지원센터, 희망지원센터, 위기대응콜 운영사업등 각 사업벌 예산과 상세한 실적 제출
   -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은 25년도 1월부터 실제지급 현황 포함해서 제출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7. 학대피해노인 사례관린(2건) 내역

8. 시설 후원금 현황 및 내역

9. 법인 결산자료 현황

10. 최근 3년간 법인 이사회 회의자료

11. 공고문, 정관, 회계결산서, 24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25년도 사업계획서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12. '24~'25년 이직률이 높은 사유, 이직자들의 구체적 이직 사유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13. 부서러기사랑나눔회 법인 현황(예산포함) 3개년

14. 위탁기관 사업비 세부내역서

- 여아, 남아 가각 23-24 결산서
- '25.3분기 추경예산서

15. 직원 8명에 대해서 김00등 무기명으로 작성해서 호봉 및 경력 등 직원 이력 현황

<서울광역자활센터>

16. '24~'25년 중앙자활자금 지원절차, 지원내역

17. '24~'25년 야구장 다회용기 사업비 지출내역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 요구
계	86	29	40	17
시민건강국	44	13	22	9
보건환경연구원	3	-	2	1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24	12	9	3
건강 관련 시설	15	4	7	4

2 세 부 내 역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시민건강국 -13건

1. ‘손목닥터9988’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 ‘만 10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서울 소재 직장인·대학생을 포함하여 지원하여 사회보장협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짐. 법적 체계를 넘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책임 소재 명확히 할 것.
2. ‘손목닥터9988’ 사업의 효과성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되고 있음. 성과 평가체계 마련하여 효과성 명확히 입증할 것.
3. ‘손목닥터9988’ 가입자 250만 명 중 주소 등 기본정보 인증 안 된 미인증 가입자가 44만 7천 명임. 미인증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를 성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며, 미인증자에게 가입 및 포인트 적립까지 허용한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 할 수 있음. 개선할 것.
4. 시립병원 운영 개선을 위해 2억 4,200만원 투입해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장에게 임명·예산 권한 집중 등으로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중요한 공적 연구용역에 자의적 의견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5.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90% 이상이 서울시 공공의료에서 치료를 못 받고 10%만 서울시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검토 바람.
6.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센터 정치적 행위관련 2023년 지적하였음. 2025년 5월에도 정치적 행사 참석 협약서에 정치적 행위를 하였을 시 해지할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
7. 직영병원인 어린이병원(200병상), 은평병원(190병상), 서북병원(295병상)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임. 「의료법」 제62조에 100병상 이상은 의료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직영병원 3곳은 의료 예산 시스템이 아닌 행정 예산 시스템인 'e-호조'를 사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가 분석 등 진료과별 손익계산이 불가능하며 적자 원인 파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므로 직영병원이 병원 회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8. 서울시가 25년 공공병원 손실보전금의 실제 손실 추정액(약 781억)을 산출하고도 313억 안에서 각 공공병원에 정책적으로 배분. 2016년~2019년 365억선, 2020년~2022년 347억선, 2023년 398억, 2024년 498억이었음을 보았을 때, 공공병원 손실보전금이 마치 총액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며, 공공의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공병원 손실보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이는 공공병원의 표면적 적자를 가속화 시키고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수행 의지를 꺾으므로 실제 손실금에 맞게 추계하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전금 제도를 개선할 것.
9. 서울시 공공병원 체계 전환 및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약 2010년대부터 8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공공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병원의 전반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내고 추진 목표 시점을 명확히 할 것.
10. 북부병원 호스피스 대체인력 비용부담 관련, 용역업체 관리가 잘 안되는데 타 병원도 실태조사 필요하며, 북부병원 용역업체의 대체인력 확보 유무도 확인 바람
11.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대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음.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함.
12.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8개 자치구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구비 부담을 이유로 자치구 참여가 저조하므로,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13. 산후조리원의 행정처분 및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부적절한 상황이므로 관련해서 지도점검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2건

<병원 공통>

1. 병원의 진료 방해 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70건 중 유죄 판결이 2건에 불과하는 등 현장의 의료진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서울의료원>

2. 2억 4,200만원 투입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가 서울의료원 중심의 단일관리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장에게 임명·예산 권한 집중 등으로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공적 연구용역에 자의적 의견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
3. 범죄전력 조회가 필요한 취업제한대상자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중랑구 보건소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책임 있는 윤리의식 확립과 내부 관리 강화가 필요함.
4. 자체감사 결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109건 지적됐으며, 대부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속 직원에 대한 사례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폐합 과정에서 임금을 시간외수당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임. 관련하여 양측 입장 정리해 보고할 것.
5.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통폐합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통폐합 이후 퇴사자 증가, 조직 불안정, 연 10억 임대료(서울의료원과 별도 건물 사용) 등 통폐합 목적 및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통폐합 효과 창출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함.

<어린이병원>

6. 기부금이 병원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기부금은 의료 취약계층들에게 우선순위로 쓰여지는 게 적정하다고 봄.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이 계속 늘어나, 이로 인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바람.
7. 현재 어린이병원은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임. 서울

시 직영병원인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은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과 기부·후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병원은 사회복지사가 여러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서울시 직영병원으로서의 사회공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의문임. 특히, 사회공헌사업의 기획 및 추진, 기부금 운영의 우선순위 설정 등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 할 통합 관리체계가 부재해 보이므로, 전담부서 신설 또는 조직 재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함.

8.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결원이 다른 과에 비해 특히 심각함.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진료 대기 기간이 1년이 넘어, 환자의 적기 치료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함.

<은평병원>

9.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의 수용 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임. 취약계층 지원은 공공의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만큼, 개선 방안 검토 바람.

10. 은평병원 세입, 세출 부분 금액 차이가 많이 남. 현대화(리모델링) 사업 118억 제외하고도 차액이 89억 정도 나고 있어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동부병원>

11. 동부병원의 IPS 침입 탐지 경보가 32만건 이상으로 타 시립병원을 압도하며 전체 병원 경보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보안 취약성이 드러남. 또한 과거 EMR 시스템 구축 시 필수 테스트를 생략하고 잠재적인 결함과 오류를 가진 채 시스템을 위험하게 오픈한 사례를 보았을 때 환자의 의료 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서울시 사이버 안전센터와 공조하여 정보보호 솔루션에 대한 전면 재검증 및 결함 시스템을 보완할 것.

12. 동부병원의 경우 자본잠식, 유동부채가 당좌자산의 2배를 육박, 20년이 지난 인공호흡기를 아직도 사용하는 등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임에도 직원 및 가족 감면 건수가 최근 3년 18,134건 금액은 4억 7천만원임. 이는 의료취약계층

감면 내역인 5,649건, 3억 8백만원을 상회하는 수치이며 임금이 체불되어 6.94%의 금리로 20억을 빌려야 하는 재정 악화 상황에서, 이렇듯 공공병원 예산 사용 우선 순위가 뒤바뀐, 공공병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영을 지양하고, 취약계층이 비급여 항목 등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건강 관련 기관 -4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3배 이상으로, 총 65명의 인력을 운영하며 타 센터에 비해 막대한 인건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하고 전문성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에 대한 리빌딩이 필요함.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2. 광역심리지원센터는 기존 기관과의 차별성 부족 및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이 지적되고 있으며, 작년에 권역별 4개 심리지원센터를 통합해 광역센터로 전환했음에도 블루터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기존 체계가 안내되어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조례에는 '심리지원센터, 광역센터, 자치구별 센터'가 혼재되어 실제 운영체계와 불일치하고 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정비와 개정 필요함.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3. 자살위기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한 공감도 필요. 상담사 채용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채용 바람.
4. 자살 예방교육을 한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2 건의사항

◆ 시민건강국 - 22건

1.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이 주로 강남권(서남, 동남)에 치우쳐 있어 강북권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긴급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완화 효과가 있었으나 2026년 종료 예정으로 확인됨. 강북권역 주민도 긴급치료센터에 대한 기대감 있으니 검토해 주기 바람.
2. 시립병원 마스터플랜이 기존 병원의 기능·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주민 체감도가 낮음. 시립병원 신설이 어렵다면, 민간병원 지원 등 보완 대책 검토가 필요함.
3.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금천구, 은평구 등 간호사가 없는 자치구가 있음. 2026년 통합돌봄 시행되는 상황에서 의료가 강화되는데 필요한 인력배치 등 서비스 표준안 마련할 것.
4.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계획 있었으나, 동남권은 상급종합병원 병상이 충분하여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됨. 의료환경이 취약한 북부권역에 건립하는 방안 검토 바람.
5. 한의약치매관리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란 등으로 내년도 예산 미반영된 상태임. 그러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완전 폐지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타당한 운영 방안 검토 바람.
6. 건강총괄관이 건강·식품 기업과 협업하여 제품 개발 및 광고에 참여함. 또한, 특정 브랜드에서 본인의 레시피를 활용한 잡곡 제품을 출시하면서 본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하고, 서울시의 잡곡밥 사업에도 구상·자문 역할을 수행함. 공적 지위를 부여받은 건강총괄관이 개인 상업활동에 관여하고, 그 내용이 서울시 공적 사업과 유사하거나 연계될 경우, 사적 이익과 직무 수행 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함.
7. 지역 돌봄통합 관련하여 시민건강국 내 건강장수센터, 방문건강관리, 시립병원 퇴원환자 관리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합 정리해서 추진 방향 등 보고 바람.
8. 경미한 진료 시 과거에는 18세 이상이라도 어린이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했으나, 해당 조치가 2024년 이후 중단되어 현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민원이 있음. 어린이 진료를 위한 특수목적 병원이지만 공공병원인 만큼, 18세 이상이라도 의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료 제공은 해주기 바람.

9. 치매관련 프로그램에 노래 치료활용 검토 바람.
10. 청소년 열독감이 유행, 소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병원 및 약국에 안내 바람.
1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등록 요건이 있으나 전문의가 퇴사한 이후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진료하는 병원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 필요함.
12. 서울마약관리센터 개소 이후 내원환자 현황에 서울·경기가 많고 20~30대가 늘어나고 있음.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시간 연장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바람.
13. 산후조리원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람.
14. 자치구에서 다양한 방문이나 유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합돌봄을 위해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장수센터르 늘리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15.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메이드 호스트카페 등이 미성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 및 대책이 필요함.
16. 서울의료원 등 대형 공공병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ABC 갈랩과 같은 원가관리시스템을 나머지 병원에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할 것.
17. 현재 의사 출신 건강총괄관의 역할이 자문 및 시민 건강 예방에 국한되어 병원의 조직 및 경영 구조 개편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차기 총괄관과 같은 역할을 선임할 때에는 공공의료 체계의 비효율을 객관화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조직 개편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볼 것.
18. 장애 동행 치과 인터넷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으며, 장애 동행 치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많은데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보완이 필요함
19. 의료기관별 예산지원 내역과 진료실적을 비교하여 지원 금액에 비하여 진료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3차 의료기관(3개소) 중 강서, 양천, 구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데 개선해 주기 바람.

20.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 중 산모 어깨 탈골로 소송 발생한 민원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하고 '26년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사항도 보고 바람.
21. 손목닥터9988에는 민감한 건강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누출 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됨. 개인정보 보호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주기적 보안점검, 해킹 대응, 외부 보안 및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관기간과 파기 절차, 장기간 미사용자 데이터 관리도 필요함.
22. 손목닥터 서버 관련 서울시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및 데이터 분산 가능성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ADHD 치료제가 환청, 환각 등 아이들 부작용이 심함. 연구원에서 검사와 함께 홍보하고, 시민건강국과도 대책을 논의하기 바람.
2. 어린이집, 키즈카페, 학원가 등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에 비고란을 만들어 재검사 시기와 적합 여부 등 재검사 결과를 기재하고, 지하철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기준 초과된 경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함께 챙기길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9건

<서울의료원>

1. 장애인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 발생 시 문자 발송과 전화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장애인이 후속 진료 절차를 이해하거나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주기 바람.

<어린이병원>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으로 확대했다고 하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와 분리될 때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격리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단기 입원 환아까지 100% 통합서비스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 병동 확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3. 장기 입원 환자 중 성인이 된 경우 어린이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병원의 만성적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등 방안 검토 필요함.
4. 외래진료 환자 중 서울시민 외의 비율이 38%를 차지함. 서울시 아이들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서울시민 외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함.
5.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 발견 시 충분한 상담과 안내가 필요함에도, 최근 예약 간격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상담 시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검토 바람.
6. 외래에서 소아정신과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발달 문제 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이들의 발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
7. 경미한 진료 시 과거에는 18세 이상이라도 어린이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했으나, 해당 조치가 2024년 이후 중단되어 현재는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민원이 있음. 어린이 진료를 위한 특수목적 병원이지만 공공병원인 만큼, 18세 이상이라도 의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료 제공은 해주기 바람.

<보라매병원>

8. 올해 2월 18일 발생한 전산장애 후속조치 중 미진행된 '백업 디스크 솔루션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바람.
9. 공공의료 사업 중 '지역사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은 주민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동작구 또는 인근 관악구 보건소, 관악구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를 확대할 필요 있음

◆ 건강 관련 기관 -7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일정 수준의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체계 운영 상황 상세 보고 바람.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2. 공공후견인 보수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 중이나, 교육 시기 및 인원을 보다 적절히 조정해 시행할 필요 있음.
3.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역치매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바람
   -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
4. 공공후견인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5. '심리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참여기관 신청 및 등록 절차가 기본 정보 제출만으로 이루어져 검증 신뢰성이 부족해 보임. 모니터링 참여 절차와 검증 방식에 대한 보완과 개선 필요함.
6. '민간심리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자료가 평균값인지, 특정 기관의 샘플인지 구분 없이 제출되어 평가 결과를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자료 제출 시 수치의 기준과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출할 것.
7. 공공민간심리서비스 모니터링 관련, 미래활짝센터와 같은 심리치료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알고 발굴해야 함. 특히 시립병원 등 공공과 민간의 연계 발굴이 필요함.

3 기타 자료요구

◆ 시민건강국 - 9건

1. '손목닥터 9988' 연도별, 연령별, 성별 참여자 수
2. '브레인핏45' 연령별, 성별 가입자 수
3. 3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2025년 5월15일 센터장 포함 전직원 출장 및 휴가내역 출장비 지급내역 지도점검내역 및 결과 보고서
4. 메이드 카페(성상품화) 현황(지역별 점검대상, 점검실시횟수, 적발건수 위반내역, 행정처분 결과 등)
5. 2023년~2025년 현재 은평병원 일별 외래 환자 수
6. 2025년 마약관리센터 일별 외래환자와 현재 입원환자 수
7. 2025년 마약관리센터장 근무현황(월별 실제 출근일 및 진료일, 출장 및 외근일)
8.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자료
   - 지정병원 현황, '25년 누적 이용건수, 병원별 예산현황
9. 3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 2023~2025 현재까지 후원금 수익, 지출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 1건

1.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및 인력 현황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3건

<서울의료원>

1. 장애유형 별 건강검진 인원, 검진 이후 결과 통보 방법

<어린이병원>

2. 영유아 건강검진 실적(자치구별, 회차별)

<서북병원>

3. 2025년 기본경비 내역서

◆ 건강 관련 기관 -4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 근무중인 41명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간호사 14명 경력, 근무이력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2. 기억키움학교(각 구 쉼터) 연 이용인원 감소내역(사유)

3.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해당 단체와 업무연계 현황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4. 트라우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현황